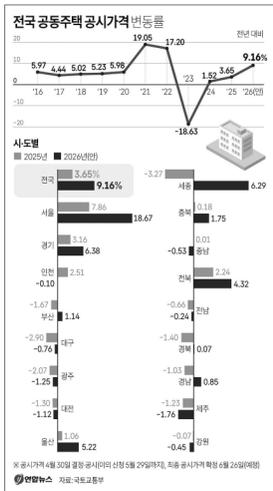


지역 아파트 공시가 4년째 하락...전국 9.16%↑ '온도차'



광주 -1.25% 특·광역시 최대 하락...평균·중위 쪼갤 전남도 -0.24%...서울 18.67% 상승 5년만에 최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광주·전남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상승했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1.25%, 0.24%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광주는 제주(-1.7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다.

광주는 지난 2022년 9.78% 상승 이후 2023년(-8.75%), 2024년(-3.17%), 2025년(-2.07%)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

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 8.53% 상승률을 보인 후 2023년(-10.61%), 2024년(-2.27%), 2025년(-0.66%) 등 4년 내리 하락했다.

실제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광주가 1억 6645만원, 전남이 1억 659만원으로 전국 평균(2억 8592만원)에 크게 못 미쳤다. 중위 가격 역시 광주 1억 3700만원, 전남 8400만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1억 7500만원)을 밑돌고 있다.

특히 광주는 평균 가격과 중위 가격 모두 특별·광역시 중 최저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와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020년 광주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1억 5006만원으로, 울산(1억 4287만원)에 이어 특별·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최저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지난해(3.65%)와 2024년(1.52%)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다.

평균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폭은 서울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은 작년 대비 18.67% 오르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7.86%)의 2배 가 넘는 상승률이다.

현실화율은 동결됐지만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8.98%)은 물론 실거래가 상승률(13.49%)까지 크게 웃도는 공시가격이

산출됐다.

서울 상승률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19.91%) 이후 최고치이며,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높다. 역대 최고 상승률은 '버블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양천)·분당·평촌·용인) 지역 가격이 급등한 시기인 2007년 28.40%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격은 3.37% 올라 서울과 그 외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상승률 상위 5개 지역을 보면 2위인 경기(6.38%)는 서울보다 12%p가량 낮았고 이어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순이었다. 광주와 전남 외에 제주(-1.76%),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인천(-0.10%)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중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 전국 공

동주택은 작년(31만 7998가구) 대비 약 53.3%(16만 9364가구) 증가한 48만 7362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85.1%(41만 4896가구)가 서울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4월 6일까지 의견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심사한 뒤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업체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시는 최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하나은행, 광주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호남권 중기 자금난 해소...지역 거점기업 발굴·육성

시, 하나은행·신보·기보·광주상공의 업무협약 체결 일반경영안정자금 1900억 용자...이차보전 지원도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공 협력 금융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하나은행, 광주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금융 유동성을

공급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거점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전업을 30% 이상인 지역 중소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며, 기업당 3억~5억원 한도의 용자와 함께 2~4% 수준의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이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올해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총 19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400억원은 지역 중점산업 분야의 창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에 집중 투입해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 규모를 총 19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400억원은 지역 중점산업 분야의 창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에 집중 투입해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과 보증기관도 지원에 동참한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40억원을 출연하고, 두 보증기관은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료를 감면해 보증을 발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활용을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금

융 접근성을 높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거점기업 육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과 보증기관의 보증 확대, 지자체의 정책 금융이 결합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보증기관, 경제단체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제갈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 '소상공인 상생보험' 가입 지원 금융위·보험업권과 업무협약 체결...3년간 20억 투입

광주시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공모사업'에 선정, 앞으로 3년간 총 20억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이 사고와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보험료를 지원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손해보험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보장한다. 생명보험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중대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구조다.

시는 보험업권과 협의를 통해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민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상생보험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험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는 지난 1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스피, 1% 상승 '전장후약' 마감 장 초반 3%가량 상승 오름폭 조절

코스피가 17일 3% 가까이 상승 출발했지만 유가 제하의 영향으로 1% 상승에 그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1.95p(2.92%) 오른 5711.80으로 개장해 90.63p(1.63%) 상승한 5640.48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한때 5717.13까지 올랐으나 추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오름폭이 작아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733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도 각각 5725억원, 1732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558억원 매도 우위였다. 전날 국제유가 하락 소식이 대형주 중심에 회복세가 나타났다. 다만, 다시

국제유가가 2% 이상 오르면서 상단이 제약을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2.76% 오른 19만 3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00만원 선을 '터치'한 후 반락해 0.41% 내린 97만원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장 막판 하락 전환해 전장보다 1.35p(0.12%) 내린 1136.94에 장을 끝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8.54p(1.63%) 오른 1156.83으로 출발해 한때 1160.12까지 올랐으나 장 막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악세로 돌아섰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1405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도 기관은 각각 579억원, 370억원 순매도했다. 업체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거래소 프리·애프터마켓 9월 14일로 연기 업계 의견 고려해 시행시기 변경...모의시장은 내달 6일부터

한국거래소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증권시장 프리·애프터마켓 시행일을 오는 9월 14일로 연기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시스템 개발 완성도를 높이고 충분한 테스트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기존 시행예정일이었던 6월 29일에서 약 3개월 연기했다.

이에 이달 중 오프해 약 15주 운영 예정이었던 모의시장은 다음달 6일 오프해 9월 13일까지 23주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프리마켓 종료 시간도 기존 오전 8시에

서 오전 7시 50분으로 10분 앞당겨진다. 한국거래소 프리마켓 종료시간(오전 7시 50분)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개시 시간(오전 8시) 사이에 증권사 준비시간(10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증권사가 프리·애프터마켓 참여 여부를 비롯해 연장된 시간대에 대한 참여 범위 및 시간 설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가 프리·애프터마켓 중점정 구간(애프터마켓 16시~18시)을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 차입공매도가 허용되며, 공매도 관련 NSDS(공매도중앙감시시스템), 과열제도, 가격규제 등 규제장치도 정규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프리·애프터마켓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서는 정적 VI(Volatility Interruption)를 포함한 변동성안정화장치를 강화해 특정 호가에 의해 가격 급등락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시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리·애프터마켓 지정주문은 제한된다. 하지만 지정의 유한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랩(wrap) 계약 주문 등 일부 유형의 지정 주문은 허용된다. 앞서 거래소는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거래시간 연장 추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불가피하다며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거래시간 연장 추진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담은 공식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거래소는 이달 초 회원사들과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증권업계의 우려를 수용, 거래시간 연장 시기와 관련한 일정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경쟁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래시간 연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조속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업체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